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6333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10.

발 의 자 : 서일준 · 지성호 · 임이자
김영식 · 곽상도 · 박상혁
한무경 · 이주환 · 강민국
하영제 · 이헌승 · 김태흠
조수진 · 이 영 · 추경호
김기현 · 김형동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첼탑이나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시설은 광역적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필수적 광역시설임에도 미관상 문제,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해당 주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함.

특히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선 첼탑이나 송전선로의 경우 전자파,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첼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첼탑, 송전선로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고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첼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통하여 도시지역 체계를 완비

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).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철탑, 송전선로 등 광역시설이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설치된 경우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광역시설의 종류, 인구밀집지역의 조건·범위 및 그 밖에 광역시설의 지중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「전기사업법」 제7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광역시설의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제45조(광역시설의 설치·관리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 | 제45조(광역시설의 설치·관리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철탑, 송전선로 등 광역시설이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설치된 경우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광역시설의 종류, 인구밀집지역의 조건·범위 및 그 밖에 광역시설의 지중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⑥ 「전기사업법」 제7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광역시설의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|
| <u><신설></u> | |